

Issue Paper 2021-01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과 시사점

안우진, 백원영

2021. 3. 30.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과 시사점¹⁾

안우진²⁾, 백원영³⁾

< 목 차 >

I. 서론	1
II.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정책	4
III.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10
IV. 시사점	18
참고문헌	22

연구의 개요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바뀔 미국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을 통해 보여준 교육정책은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안전한 학교 재개방, 고등 교육 접근성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커뮤니티칼리지와 직업훈련 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 주제어: 바이든, 교육정책, 고등교육, 직업훈련

1) 이 원고는 'The HRD Review' 제24권 1호에 수록된 원고를 재발간한 것임.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E-mail: awj@krivet.re.kr)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E-mail: baek00@krivet.re.kr)

I. 서론

2021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며 새 행정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의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고용, 환경, 노동, 교육 등의 어젠다에 큰 관심을 쏟아 온 경우가 많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재건을 최대 목표로 하여 당선되었다는 점을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과 이슈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를 재건하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재고용하려는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바이든 캠프의 “Build Back Better” 캠페인은 공중보건, 친환경 에너지, 사회복지 분야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취임 후 코로나19 구호 법안(9,000억 달러 규모)을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경제 부양 법안(1조 9,000억 달러 규모)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¹⁾ 오바마케어(Obama Care) 강화를 통해 공공 의료보험의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및 직업훈련 투자를 통해 사회 복지·교육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²⁾ 바이든 행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커뮤니티칼리지와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과 직업훈련 정책의 대상은 개인의 경력개발과 숙련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미혼모, 저소득층, 비백인계 학생, 장애 학생, 수감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즉,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대응과 안전한 학교 재개방, 교원 충원 및 교원 처우 개선,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역 학교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 지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시스템 위기의 해결, 교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

1) <https://joebiden.com/clean-energy/>(검색일: 2021. 2. 12.)

2) <https://joebiden.com/build-back-better/>(검색일: 2021. 2. 12.)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하며,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한국에서도 교육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는 커뮤니티칼리지와 공립대학의 학비를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Moody's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은 일련의 교육 이니셔티브를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학 전 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향후 10년간 1조 9,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Zandi & Yaros, 2020). 구체적으로, 유·초·중등교육(K-12)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 (Title I, 초·중등교육법 제1편)' 보조금을 3배로 증액할 것이라고 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교의 교사에 대한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과 고급 교육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든 임기 동안(2021 ~ 2024년)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가구소득 12만 5,000달러 이하)에 1,913억 달러, Pell 보조금에 1,464억 달러, 직업훈련(커뮤니티칼리지 도제훈련 포함)에 157억 달러, 흑인대학(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s), 부족대학(Tribal Colleges And Universities: TCUs), 소수민족 교육기관(Minority-Serving Institutions: MSIs)에 13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대학교육·직업훈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인 질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가 제안했던 공약들을 현실화해 갈 가능성이 높다.

<표 1> 바이든 행정부 교육정책 예산 추계

(단위: \$bill)

	누계	
	2021~2024	2021~2030
교육 예산 총액	636.3	1,906.4
K-12 기금*	159.7	600.0
공립학교를 위한 Title I 기금 3배 증액	72.1	250.0
3~4세 아동에게 보편적인 어린이집 제공	25.9	150.0
교사 멘토링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지원	35.6	100.0
장애 아동을 위한 공립학교에 연방정부 지원금 증액	26.1	100.0
고등교육	366.9	1,006.5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가계소득 \$125,000 이하)	191.3	522.9
Pell Grant 최고 지원금액 2배 증액	146.4	393.1
직업훈련 지원(커뮤니티칼리지-대학 견습생 제도 포함)	15.7	50.0
흑인대학(HBCUs), 부족대학(TCUs), 소수민족 교육기관(MSIs) 지원	13.5	40.5
학자금 대출	109.8	299.9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의 단순화 및 부담 경감	104.1	284.6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지원	5.6	15.3

주: *K-12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 기간을 말함.

출처: Zandi & Yaros(2020),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Trump vs. Biden.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 또는 개인 고소득자의 담세율을 높이는 골자로, 누진적인 세제 개편안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7.0%에서 39.6%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바이든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에 제시된 정책 비전을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 기회 보장 및 접근성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역 학교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백인 중심 학교구가 비백인계 인구 중심 학교구에 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Edbuild, 2019). 이러한 재정 격차는 미국의 교육 재정 시스템의 특징에 기인하는데, 교육 재정의 일부가 지역 재산세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만큼 부유한 학교구와 가난한 학교구 간 재정의 규모는 여전히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전면 또는 혼합형 온라인수업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서비스 부족, 통신망·전자기기 접근성 제한 등의 디지털 교육격차가 지적되었고, 이는 비백인계 학생, 장애 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 학습자, 농촌 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취약한 지역의 학교에 대해 연방 예산을 거의 3배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산 증액에 반영된 미국의 교육 문제를 살펴보면,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교사의 임금 문제, 교육 활동이 원활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한 학생인권조례의 부활 문제, 공립대학에 대한 학비 면제 문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 모든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을 질 높게 만드는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The New York Times, 2020. 12. 20.). 특히 라틴계 교사 출신이면서 코네티컷주 교육국장(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재직한 교육 전문가이자 대표적 공교육 옹호론자인 카르도나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하면서,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백인 학생과 비백인계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영어 학습자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The Wall Street Journal, 2020. 12. 22.).

(1)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장애 학생, 영어 학습자, 통신망·전자기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질 높은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remote and hybrid learning)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³⁾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교육 예산 확대를 발표하였다. 예산의 활용 방안으로 교사의 급여 인상,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면제,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내걸었다. 학교 상담사나 간호사 같은 지원 인력을 확충하며, 장애인 교육법 대상자를 위해 연방정부 기금을 마련하는 등 교육 복지를 늘리는 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Title I, 초·중등교육법 제1편)을 3배로 증액하면서 고급 교육 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빈곤층과 부유층 학군 간, 인종·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 원격학습 차이에 따른 교육적 불평등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디지털 기기 및 초고속 인터넷 의존도가 늘어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PC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없는 사람이나 인터넷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거주자는 원격수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반면, 부유층 지역 학군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부모들은 개인 교사를 동원한 그룹 과외를 통해 학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다. 디지털 격차는 학력 격차를 심화하고,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보 격차가 심한 지역에 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저소득층에 통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20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를 확정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에 향후 10년간 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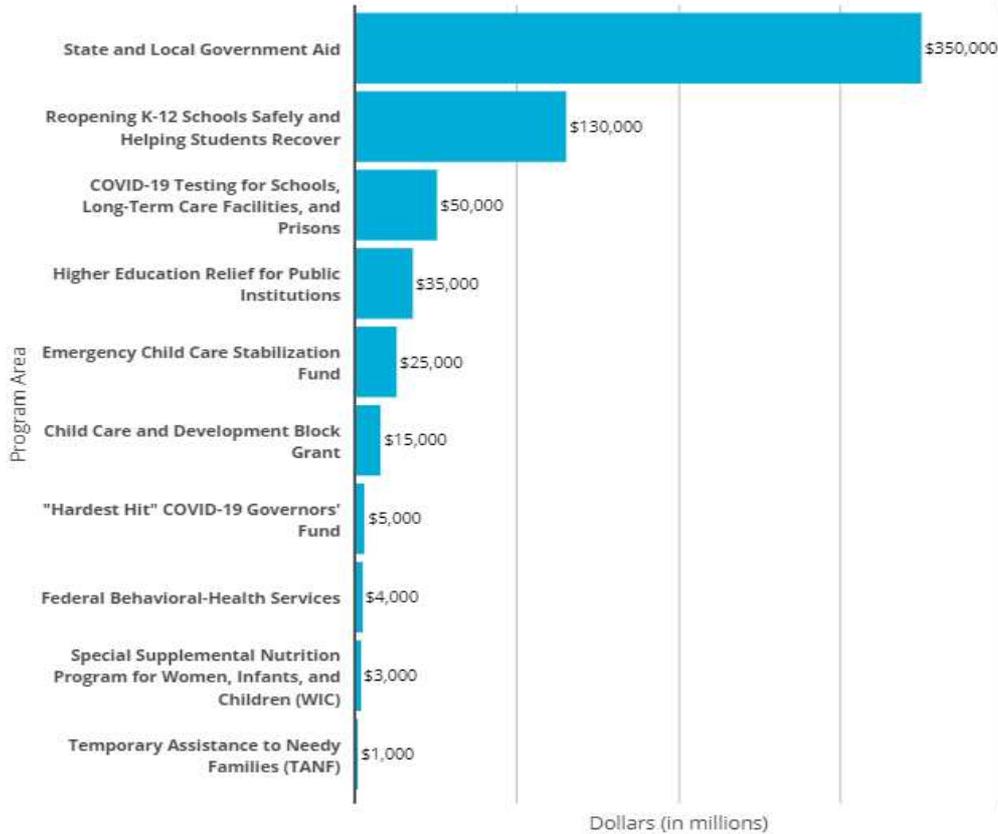
3) <https://joebiden.com/school-reopening/>(검색일: 2021. 2. 23.)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광대역망 확대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1조 3,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광대역 인터넷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접근성 제고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질 높은 대면 수업 제공

바이든 행정부는 질 높은 대면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는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하며,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방안 중에 하나로 학교 재개방을 위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가 권고하는 교실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노후 건물 환기시설 개선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1,300억 달러(약 143조 5,980억 원) 지원을 제안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전인 1월 중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발표하였다. 총 1조 9,0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계획에는 유·초·중등교육(K-12)을 제공하는 학교가 안전하게 재개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출처: EducationWeek. URL: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what-bidens-american-rescue-plan-would-do-for-schools-and-students-in-one-chart/2021/01>(검색일: 2021. 2. 25.).

(1)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연방 예산 지원

바이든 행정부는 안전하게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학교 방역, 환기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 인력의 충원 및 학습팟(learning pods)⁴⁾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의회가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예산으로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학습팟(learning pods)은 소규모 학습 그룹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몇몇 가정들이 모여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대신 공동으로 교육하는 것임. 팬데믹팟(pandemic pods), 교육팟(education pod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 이는 구성 인원, 교사,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공공시설 내 대여 공간, 학습팟 구성원의 거주지 등으로 각각 다름(CBC, 2020).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은 학생용 실험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학교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 보호 장비 및 방역 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 교실 공간, 학급 규모, 교통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2020~2022년까지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5,550억 달러(원화 약 607조 8,000억 원)에 달할 수 있고, 만약 주정부의 교육 예산이 5% 감소될 경우 약 2만 8,000명의 교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주정부가 교직원 감축 없이 학교 방역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적자 지출을 계속할 수 없기에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5단계 로드맵(five-step road map)'을 발표하면서,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clear, consistent, effective)' 국가 수준의 지침을 요구하였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연방기관들을 통해, 주별·지역별로 학교 재개 가능 여부와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2) 교원 충원 및 처우 개선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교육 위기 극복 방안으로 우수 교원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원들이 경쟁력 있는 임금과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18년 공립학교 교사의 임금은 유사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보다 21.4% 낮았으며, 1996년 이후 주당 평균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교원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타이틀 I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이러한 예산으로 임금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멘토링, 리더십,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이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이나 이중언어(bilingual) 교육과 같이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추가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교원들의 수업 전념을 위하여 연방정부가 나서서 상담·보건·복지 등의 비교과 전담 직원 수를 2배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⁵⁾

바이든 행정부는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교원들은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에 심리학자,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다른 건강 관련 전문가의 수를 2배로 늘려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어린이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훈련된 전문가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학교에서는 심리학자 1인당 학생 비율이 약 1,400대 1인으로, 전문가들은 최대 700대 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에 고용된 심리학자,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보건 전문가의 수를 2배로 늘리기 위해 학교 정신건강 전문가에 전례 없는 투자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보건 사회 서비스, 성인 교육 과정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족원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남은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를 지역 허브(community hubs)로 만드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확대하여 30만 명의 학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립학교 시설 문제에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였다. 미국 공립학교의 시설은 미국 토목공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로부터 D+ 등급을 받았다. 미국은 매년 460억 달러의 학교 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재원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수천 개의 학교가 낡고 안전하지 않아 학생들과 교사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공립학교 건물의 개선을 위하여 연방 공공기반시설 법제화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금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방지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미래 직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첨단의, 에너지 효율적이며 기술과 연구실을 갖춘, 혁신적인 학교를 짓기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5) 바이든 행정부의 대선공약(Joe's Vision)을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되었음(<https://joebiden.com/education/> (검색일: 2021. 2. 25)).

Ⅲ.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1.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현안

오늘날 세계화 추세와 끊임없는 기술 발전에 따라 초·중등교육만으로는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대략 10개의 일자리 중 6개의 일자리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1973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 28%였던 것과 비교해 2020년에는 65%의 일자리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Carnevale, A. et al., 2013).

[그림 2] 기업의 근로자 학력 요구 수준 변동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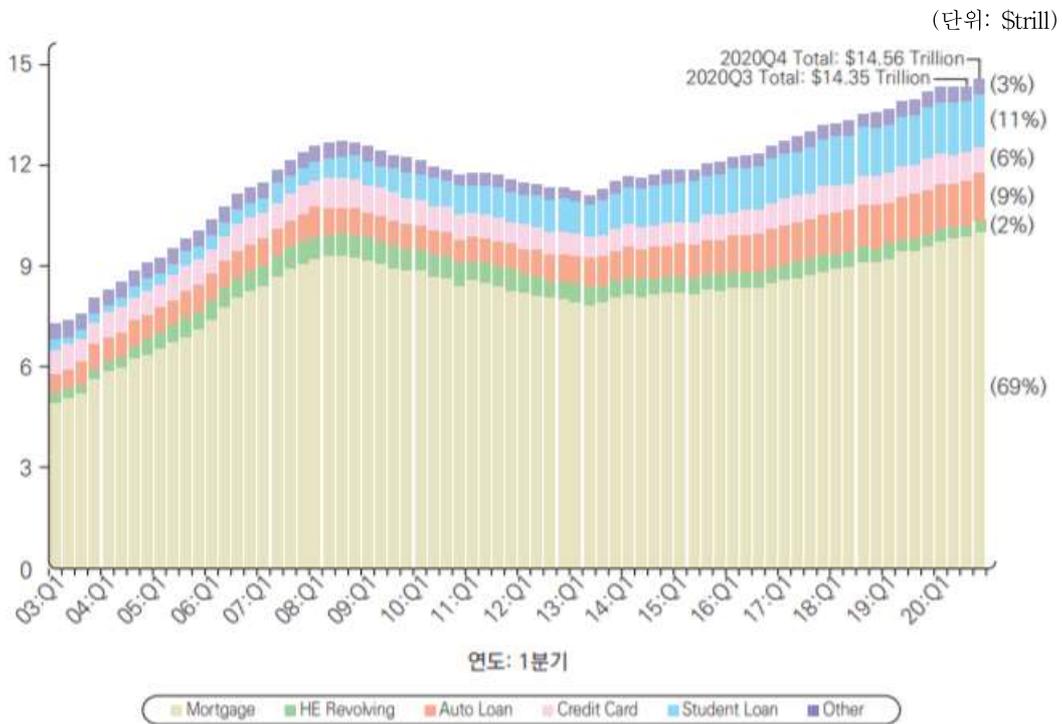
주: 일부 연도의 합계는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Carnevale, A. et al.(2013). Recovery: Job Growth and Education Requirements Through 2020, p.15 인용.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이용자 통계를 살펴보면 성인 5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⁶⁾,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난은 학자금 대출 상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03년 1분기 2,40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4분기 1조 5,600억 달러 수준(전체 가계대출 대비 11%)까지 증가하였으며, 미국 가계부채에서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가계부채 총액 및 구성요소



출처: New York Fed Consumer Credit Panel/Equifax URL:

<https://www.newyorkfed.org/microeconomics/databank.html>(검색일: 2021. 2. 19.)

⁶⁾<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2018-economic-well-being-of-us-households-in-2017-student-loans.htm#xfigure33-paymentstatusofloansforown-876accd>(검색일: 2021. 2. 12.)

[그림 4] 가계부채 유형별 연령별 비중



출처: New York Fed Consumer Credit Panel/Equifax URL:
<https://www.newyorkfed.org/microeconomics/databank.html>(검색일: 2021.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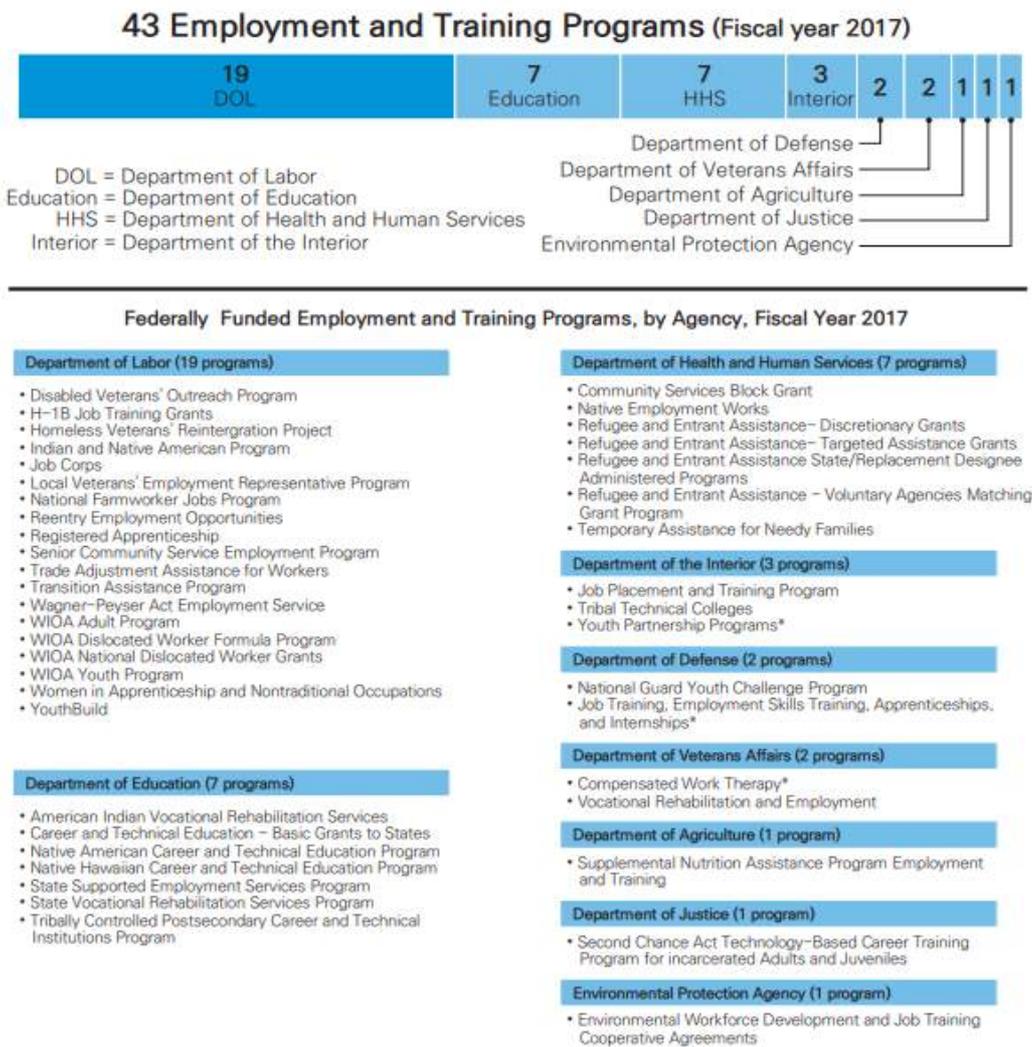
고등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흑인 그룹이 다른 인종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금융위기 기간에 재교육 및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을 이수한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 출생 세대)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증가는 인종 간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으며 은퇴 후 거주할 주택 구입, 노후 생활 재원 마련,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에 과감한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은 산업별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수개월에서 2년까지의 무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노조와 협업함으로써 도제훈련생 수를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로 인한 개인들의 부채 가중을 경감하고, 미국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견고한 중산층을 재건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Federal Employment and Training)에서는 2017년 회계 연도 기준 총 43가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연방정부에서 제공한 총 47가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보다 감소한 것이며, 지원금액 규모에서도 2009년 약 200억 달러에서 2017

년 약 14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선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했던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of Act(2009)의 만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연방기관에서 제공하는 43개 프로그램 간 유사 중복성이 높으며 그중 '취업 상담 및 평가 서비스'는 43개 프로그램 중 39개 프로그램이 유사 중복적이며 '취업준비 교육'도 43개 프로그램 중 38개 프로그램에서 유사 중복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미국 원주민, 제대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도 각 부처별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연방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2017)



출처: GAO(2019).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p.2, p.17 인용.

2. 주요 공약 사항

(1) 커뮤니티칼리지 및 직업훈련기관 지원

바이든 행정부는 변화하는 업무 특성에 맞춰 학습하며, 기술 향상을 원하는 모든 개인에게 2년간의 커뮤니티칼리지 또는 기타 수준 높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공약하였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2년간의 커뮤니티칼리지 등록금을 무상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후, 현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인 바이든 박사가 이 목표를 위해 College Promise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2년 또는 4년 무료 대학교육을 제공했다.⁸⁾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진행했던 College Promise 프로그램에 기초해, 무상으로 2년까지 커뮤니티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공약했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의 수혜 대상은 최근 고등학교 졸업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추가 교육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성인도 포함한다.

그리고 학사 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4년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흑인대학(HBCU), 소수민족 교육기관(MSIs) 등이 포함된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 체제하에서 운영될 것이며, 연방정부가 비용의 75%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커뮤니티칼리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생 유치와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증거 기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s)와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학업 및 진로 자문 서비스, 이중 등록(Dual Enrollment)⁹⁾, 학점 인정 협정(Credit Articulation agreement), 교직원 임금 및 복지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공교육 연한 확대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만약 지금 미국에서 공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면 취학 전 교육부터(3~4세) 시작해서

7) <https://joebiden.com/beyondhs/>(검색일: 2021. 2. 12.)

8)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1/09/fact-sheet-white-house-unveils-america-s-college-promise-proposal-tuition>(검색일: 2021. 2. 12.)

9)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과목을 선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임.

16년 동안의 교육을 사회경제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게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가구소득이 12만 5,000달러 이하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애자는 샌더스 의원의 제안을 채택해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정책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커뮤니티칼리지 구상은 First-Dollar 프로그램¹⁰⁾이 될 것이며, 이는 학생들이 등록금과 등록금 외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Pell Grant, 국고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이든은 주정부에게 커뮤니티칼리지와 지역사회 기반 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대군인, 미혼모, 저소득층, 비백인계 학생,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통합 지원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재 및 교통비를 충당하기 위한 공공혜택(Public Benefits)과 추가 재정 지원에서부터, 보육 및 정신건강 서비스, 교수 멘토링, 과외 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생들을 위한 긴급 보조금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도 설립할 계획이다.

2014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미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요청하였고, 이에 연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산업계의 참여와 책임을 제고하는 인력 혁신 및 기회 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¹¹⁾에 서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구상을 통해 제시된 모델을 골자로 양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스킬과 기술을 식별하고, 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될 계획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현대화에 있어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10) First-Dollar Program은 학생들에게 College Promise 기금을 Pell grant 또는 기타 보조금 보다 먼저 지급하는 기금지급 모델이며, 등록금 이상의 다른 장학금 및 보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URL: <https://www.acct.org/page/first-dollar-vs-last-dollar-promise-models>(검색일: 2021. 2. 12.)

11) 인력 혁신 및 기회법(WIOA)은 2014년 7월에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수혜집단을 크게 세 그룹(실업자,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에 따라 노동인력개발위원회(The State Workforce Development Board)를 구성하여 진로경로(Career Pathways)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써 직업훈련이 산업 수요와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안우진 외, 2019).

기획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산업계, 노조, 주정부, 지방정부, 대학 및 고등학교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견습생 프로그램을 일부 감독하는 노조와의 제휴를 통해 등록 견습생 프로그램(Registered Apprenticeships Program)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커뮤니티칼리지의 교육시설 개선과 안전을 위해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21세기 학생들이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 연방정부 재정 보조 장학금(Pell Grant) 지원 확대

바이든 행정부 교육정책의 주요한 공약 중 하나는 연방정부의 재정 보조 장학금인 Pell Grant의 지원 확충이다. 현재 Pell Grant를 통해 연간 700만 명¹²⁾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대학 등록금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1970년대에 Pell Grant가 공립 4년제 대학 등록금의 70~80%를 충당했다면(Abernathy, P. et al., 2013) 현재 그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Ma, J. et al., 2020) 이에 저소득 및 중산층 개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재정 보조 장학금인 Pell Grant의 최고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 재정을 지원할 것을 공약하였다. 또한 DREAMers(유년 시절 미국으로 온 청년들)가 Pell Grant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정 지원 자격을 보장하고, 이전에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Pell Grant 자격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3)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의 완화를 위해 개인의 연간 소득이 2만 5,000달러 이하일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면제와 함께 학자금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지 않게 지원하고, 연간 소득이 2만 5,000달러 초과일 경우 소득에서 세금과 기초생활비용을 차감한 소득의 5%를 상환토록 하며, 상환 기간이 20년을 경과하는 경우 나머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12) <https://www2.ed.gov/finaid/prof/resources/data/pell-institution.html>(검색일: 2021. 2. 12.)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4)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지원

바이든 행정부는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정부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종사하는 직원에게 5년 동안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학부 또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겸임교수들이 강의 시간에 비례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5) 고등학교-직업훈련기관-커뮤니티칼리지-4년제 대학 간 연계 협력

바이든 행정부는 고등학교-직업훈련기관-커뮤니티칼리지-4년제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학위 취득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품질과 책임을 보장하는 주에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대, 일부 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칼리지와 4년제 대학을 이중 등록하여 학위를 진행할 수 있다. 이중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칼리지와 4년제 대학의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모든 교내 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없다. 특히, 전문학사를 취득한 학생은 이후 4년제 대학 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사 학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은 이러한 연계 협력 프로세스를 더 많은 지역에 제공하고 고등학교, 커뮤니티칼리지, 직업훈련기관, 4년제 대학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더 짧은 시간 내에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 제대군인 및 유가족(Post-9/11 GI Bill)¹³⁾ 직업훈련 지원

바이든 행정부는 제대군인과 그 유가족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공헌한 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보고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제대군인과 그 유가족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13) Post-9/11 GI Bill은 2001년 9월 10일 이후 일정 조건 이상 복무한 퇴역군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URL: <https://www.va.gov/education/about-gi-bill-benefits/post-9-11/>(검색일: 2021. 2. 12.)

IV. 시사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격차의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기도 하는데, 등교 일수가 줄어들고 원격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 기기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역 학교 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고,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학교·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은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 긴급 지원금 배분 기준에 저소득층 학생 수를 포함하였고, 많은 주에서 주지사 긴급교육지원금을 원격수업 또는 전자기기 구매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의 크나큰 피해가 교육적으로는 초·중등 학생에게 가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중등교육을 살려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코로나19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수준의 차이가 현행 교육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며 교육의 사회적 격차를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언제든지 반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전자기기 지원 등 학습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책 마련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포용 기본법」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평등법」 제정 등을 통하여 광대역 인터넷과 5G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미국의 다양한 법적·재정적·정책적 지원 사항을 참고하여 국내 여건에 맞추어 반영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온라인 강의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 개선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 재개방을 위해 예산 규모만 1,3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예산은 환기 장치를 개선하거나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고, 학교 안 거리두기를 위해 교실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공간을 재설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수업 등 안전망 사업 등에도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수업 대부분을 대면으로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역사상 전례 없는 교육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 변화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전통적 교육과정에 원격교육이 융합되거나 대안적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통한 등교 수업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업 운영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온라인 강의 체제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은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교육에 결합한 에듀테크(Edu-Tech)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높였고,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과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물리적 환경 범위 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 개선 등 전체적인 교육체제 변화의 관점에서 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

3. 고등직업교육 접근성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고등직업교육 정책은 커뮤니티칼리지 및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보편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등학교-직업훈련기관-커뮤니티칼리지-4년제 대학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학위 취득을 가속화하고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의 수혜 대상은 최근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추가 교육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성인 학습자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이 처한 상황이 서로 상이함을 고려하더라도 학제 간, 기관 간의 협력과 전 국민의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고등직업교육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 현황은 대학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의 심화로 교육의 질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며 한계대학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의 주체로서 전문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직업계고-전문대학, 폴리텍대학-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증가하는 성인 학습자의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성인 친화적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4.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직업훈련 제공

바이든 행정부는 직업훈련을 숙련향상과 경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미혼모, 저소득층, 비백인계 학생, 장애 학생, 수감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도 폭넓은 재정적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훈련의 효과적 전개를 위해 산업계, 노조, 주정부, 지방정부, 대학 및 고등학교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직업훈련을 보다 강화하고,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개인의 생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기적인 취업을 위한 훈련만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사민정학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5.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

미국 의회예산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 및 세수 감소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19년 79%에서 2021년 104%로 급격히 확대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CRFB, 2020) Moody's 보고서에서는 바이든 공약 이행 시 재정 지출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7조 3,000억 달러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은 4조 1,000억 달러 증가에 그쳐 총 3조 2,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Zandi & Yaros, 2020).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산업계, 노조, 정부, 학계의 유기적 협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현재의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s)¹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혁신채권은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직업훈련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사·민·정 공조를 진흥하여 장기적인 도전과제들에 대한 통합된 해결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류기락 외, 2020).

14) 사회혁신채권은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재원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뒤, 성과(outcome)에 기반해 지급보증자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임. 특히 사회혁신채권은 대중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수혜집단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훈련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에 더 최적화되어 있음(류기락 외, 2020).

참고문헌

- 류기락 외(2020). 사회혁신과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우진 외(2019). 훈련 수요·공급 조사 분석 지원 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bernathy, P., Asher, L., Cheng, D., Cochrane, D., Mais, J., & Thompson, J.(2013). Aligning the means and the ends: How to improve federal student aid and increase college access and success. White Paper. Oakland, CA: 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
- Carnevale, A. P., Smith, N., & Strohl, J.(2013). Recovery: Job growth and education requirements through 2020.
- CBC(2020. 9. 25.). Concerns arise over inequity of families' pandemic 'learning pods'. URL: <https://www.cbc.ca/news/canada/learning-pods-across-canada-1.5697507> (검색일: 2021. 2. 25.).
- CRFB(2020). The Cost of the Trump and Biden Campaign Plans.
- Edbuild(2019). \$23 Billion. URL: <https://edbuild.org/content/23-billion/full-report.pdf>(검색일: 2021. 2. 22.).
- EducationWeek(2021. 1. 20.). What Biden's 'American Rescue Plan' Would Do for Schools and Students, in One Chart(검색일: 2021. 2. 25.).
-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Website. Report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U.S. Households in 2017 - May 2018. URL: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2018-economic-well-being-of-us-households-in-2017-student-loans.htm#xfigure33-paymentstatusofloansforown-876accfd>(검색일: 2021. 2. 12.).
- GAO(2019).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Department of Labor Should Assess Efforts to Coordinate Services Across Programs.
- Joe Biden for President: Official Campaign Website. Joe Biden's Roadmap to Reopening Schools Safely. URL: <https://joebiden.com/school-reopening/>(검색일: 2021. 2. 23.).

-
- _____ . The Biden Plan for Educators, Students, and Our Future. URL: <https://joebiden.com/education/>(검색일: 2021. 2. 25.).
-
- _____ . The Biden Plan for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URL: <https://joebiden.com/beyondhs/>(검색일: 2021. 2. 12.).
-
- _____ . Build Back Better: Joe Biden’s Jobs and Economic Recovery Plan For Working Families URL: <https://joebiden.com/build-back-better/>(검색일: 2021. 2. 12.).
-
- _____ . The Biden Plan for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URL: <https://joebiden.com/clean-energy/>(검색일: 2021. 2. 12.).
- Ma, J. Pender, M., & Libassi, CJ.(2020). Trends in College Pricing and Student Aid 2020. New York: College Board.
- New York Fed Consumer Credit Panel/Equifax. URL: <https://www.newyorkfed.org/microeconomics/databank.html>(검색일: 2021. 2. 19.)
- The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 Trustees Website. First-Dollar vs. Last-Dollar Promise Models URL: <https://www.acct.org/page/first-dollar-vs-last-dollar-promise-models>(검색일: 2021. 2. 12)
- The New York Times(2020.12.22.). Biden Picks Latino Chief of Connecticut Schools as Education Secretary. URL: <https://www.nytimes.com/2020/12/22/us/politics/biden-education-secretary.html?searchResultPosition=1>(검색일: 2021. 2. 22.).
- The Wall Street Journal(2020. 12. 22.). Biden to Nominate Miguel Cardona as Education Secretary. URL: <https://www.wsj.com/articles/biden-to-nominate-miguel-cardona-as-education-secretary-11608646951>(검색일: 2021. 2. 22.).
-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Website. FACT SHEET - White

House Unveils America's College Promise Proposal: Tuition-Free Community College for Responsible Students. URL: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1/09/fact-sheet-white-house-unveils-america-s-college-promise-proposal-tuition-free>(검색일: 2021. 2. 12.)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Website. Post-9/11 GI Bill(Chapter 33). URL: <https://www.va.gov/education/about-gi-bill-benefits/post-9-11/>(검색일: 2021. 2. 12.).

U.S. Department of Education Website. Distribution of Federal Pell Grant Program Funds by Institution URL: <https://www2.ed.gov/finaid/prof/resources/data/pell-institution.html>(검색일: 2021. 2. 12.).

Zandi, M., & Yaros, B.(2020).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Trump vs. Biden, Moody's Analytics, 23. September.